계엄령 "내란죄 등 위법, 계엄사령관도 처벌 가능"

지역 법학과 교수들 위헌 주장
절차상 문제·입법부 권한 박탈
출동 병력 지휘관급 법적 책임
민변 "책임자 엄중 수사·처벌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4일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과 교수는 4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계엄 발동 사유 뿐 아니라 절차 과정에서도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점, 국무회의가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 등 공개되지 않았던 점들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우리나라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도 위헌적 요소를 띠고 있다고 짚었다. 헌법 77조 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와 법원(사법부), 언론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조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포고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을 통해 입법부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민 교수의 설명이다.

김명식 조선대 법학과 교수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제 요구를 할 수 없게 물리적으로 국회에 침입하고 활동을 저지하려 했던 행동은 당연히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있을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재석하지 못하도록 체포해야 하는데 '영장 없는 체포'를 위한 명분으로 해당 항목을 계엄 포고령에 추가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명령을 받거나 하달한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등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 교수는 "이번 계엄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이는 곧 형법 91조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계엄군이 들어갈 수 없는 국회의사당 점거를 시도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등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들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해서 수사해야 될 대상들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의 경우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동한 병력 중 지휘관급인 중대장과 소대장까지도 경중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단체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자 엄중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비상계엄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포돼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상 계엄과 이에 따른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 대원칙을 위반했고 계엄군을 이용해 국회 개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등 헌법이 예비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1980년 광주를 기억하고 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장계엄군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슬픔과 기억 때문에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과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불안·혼란 속 긴 밤 지샌 시민들 '긴장'… 하루종일 뒤숭숭

계엄령 속보 지켜보며 공포 느껴
"정부 신뢰 훼손 대통령 책임져야"

광주 시민들이 4일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며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긴 밤을 보냈다. 국회의 해제 요구로 비상계엄이 일단락됐지만, 충격은 다음날 아침까지 시민들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김정호(52·직장인)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음식을 먹다가 TV로 생중계된 윤대통령의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크게 놀랐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물으며 급히 자리를 정리했다. 김씨는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내일부터 광주 도심에 탱크와 군인들이 배치되고 일상이 통제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씨처럼 계엄령 선포에 놀란 대다수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일상이 어떻게 변할지 등을 염려하며 불안한 밤을 보냈다.

다음날인 4일 비상계엄령 선포 명령이 해제됐지만 지역민들은 공포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긴장한 모습으로 출근길에 나서는 분위기였다.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정류장에서 만난 대학생 박수왕(22)씨는 전날의 충격을 말하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일찍 잠에 들었던 그는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다. 기상 악화나 재난 상황이 있을 때면 시끄럽게 울려대던 긴급재난문자마저 발송되지 않은 탓에 의아함을 느끼던 그는 기사를 접한 뒤 잠이 확 달아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어제 속보가 뜬 이후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 과정, 계엄군 철수 등을 살피며 아침을 맞았다"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나 아침까지도 안심이 되지 않아 등교를 할지 말 지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일찍 학교에 도착한 동기들이 벌써 강의실은 비상계엄 이야기로 뒤숭숭하다는데, 다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당황한 것 같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어떨지 예측이 되지 않아 걱정이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경제적 불안감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관광업계에서는 비상계엄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함평군에서 프로골퍼로 활동하고 있는 정수영(30)씨는 무안공항의 신규 국제선 노선 운항이 시작된 상황에서 계엄령이 관광업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겨울철이면 동남아와 연계한 골프 관광 상품이 큰 인기인데, 비상계엄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와 같다"며 "시민 안전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관광 상품 모집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정민지(52)씨 역시 불안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결정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게 됐다"며 "계엄령이 해지됐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고 우려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일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현기·정상아 기자